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 6.

대한민국정부

공백

- 목 차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79건)

1. 지방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수익 구조, 자산관리회사 출자,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배 시 제재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할 것 3
2. 국무총리 산하 불로소득환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연구하는 등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 4
3. 건설사(임대사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는 뉴스테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4. 100%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방공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
5.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7
6.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8
7. 신용카드 또는 여권과 결합된 형태의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9
8.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 형식적 업종 분류보다는 업종 현황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업종별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 가족 인건비 등을 고려한 보상 방안, 영업제한 외 조치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11
10. 코로나19 일상회복 준비 상황을 보고할 것 12
11. 병원 전달체계 문제 해소를 위한 주치의제도를 검토할 것 13
1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우울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심리지원단과 마음건강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우울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응할 것 14
13. 심리상담 통합법제 마련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나 입법 계획을 제출할 것 · 15
14.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에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 16
15.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후유증 관리를 통한 일상 복귀와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은 보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할 범부처 통합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7
16. 중증환자 치료실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협상한 공공의료 확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할 것 · 18
17.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해운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갈등, 학교급식법 관련 교육부·식약처·환경부간 갈등을 포함하여, 입법 또는 정책 집행에 있어 부처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의 통합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검토할 것 19

1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쟁당국과 소관부처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율할 것 20
19. 갈등관리 시한제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등 부처간 갈등이 해소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1
20. 반구대암각화와 광주군공항 등 갈등과제로 선정된 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결할 것 .. 22
21.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갈등 사례 및 회의록과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성과, 법적 근거, OECD 주요국 사례를 보고할 것 23
22. 화력발전소 건설재검토 및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간 중재를 계속하는 등 해결 완료항목에 대한 진행상황
재검검을 포함한 갈등과제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 .. 24
23. 발전사 관련 노무비를 전수조사하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이행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전정비 업무의 한전KPS로의 재공영화
및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25
24. 온라인청년센터에 대한 청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6
25.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충분히 위촉하고, 위촉 시 청년임을
고려하여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기회를 부여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27
26. 기획재정부에 청년 인턴 업무를 일임하기보다 청년정책조정실이
청년 인턴 현황 관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28

27. 은행 채용 비리 등 청년 채용 문제 해결 방안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등 방안을 검토할 것 29
28.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0
29.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정하여 밝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 31
30.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점검 조치 실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 · 32
31.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프로세스를 개정할 것 33
32. 부패예방추진단의 군납 분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34
33.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사와 감찰 계획을 보고할 것 35
34.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36
35.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인한 국가부채 과소계산 문제를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할 것 37

36.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8
37. 국책연구기관 지정수탁제 도입 및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의견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할 것 39
38.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하여 외환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 .. 40
39.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41
40.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42
41.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43
42. 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내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44
4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학교 복합개발에 관한 범부처 논의를 실시할 것 45
44. 산업별 기술인재 수요 전망을 교육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할 것 46
45. 지방재정 교부금과 고등교육 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47

46.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정부 재정 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
47.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9
48. 국무조정실 내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과 달리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공무원의 보수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50
4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 오염원전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해제 요구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철저히 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적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며, 수산물이력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51
50.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구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2
51. 한강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할 것 .. 53
52.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에 신경을 쓸 것 54
53.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시 석탄발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 민간사업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재무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55

54.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 56
55.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ESG 로드맵(지표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확산 지원 등)을 마련할 것 57
56. 수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홍보와 부처 간 수소충전소 정책 조정 등에 노력할 것 58
57. LH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이 축소되어 청년들이 피해를 입거나 기능 분리로 인한 지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9
58. 이동통신 5G 서비스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60
59. 학교 공기 질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1
60.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공정경제3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2
61.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관련 예산 반영 등 상황을 파악할 것 · 63
62. 타투에 관한 행정·사법의 충돌 및 부처와 의사협회간 입장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 64
63. 스마트시티 등 관련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기구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5

64.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범죄 전담기구 또는 대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66
65.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범정부 합동 불법면허
대여 광고 특별단속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7
66.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개정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조정을 검토할 것 68
67. 경찰 지도부와 현장경찰 간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가질 것 69
68.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소통이 쌍방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70
69.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하고 협의
할 것 71
70.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72
71.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하여 정부광고 대행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 73
72. 중국 헝다그룹 파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74
73. 범정부 차원에서 소공인에 대한 정책 비중을 대폭 높이고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75

74. 대리운전자의 중복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76
75. 보훈병원에 대한 야간간호료 등 추가 인건비 지원 관련 기관 안내
및 개선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77
76.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의혹 관련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타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8
77.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79
78.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80
79.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
부처를 변경할 것 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45건)

1. 소관 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연구 비중을 줄여야 하고, 지정수탁제 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85
2. 정책연구결과를 민간·언론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관점에서 성과 홍보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6
3.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운영할 것 .. 87
4.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88
5. 기관별 과도한 법인카드 발급을 지양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89
6. 부동산 관련 정보 취급 기관(국토·KDI·교통·조세·환경)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 등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90
7. 공동구매 방안 모색 등 국내외 학술지 플랫폼 활용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91
8. 이사회 구성 시 정부 관료 과다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장 선임 및 연구원 기능을 정상화할 것 92
9. 문화 관련 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으로 소속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산업 등 인문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93

10.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기본계획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94
11. 연구기관 연구진 투트랙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95
12. 연구기관 평가 시 변별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96
13. 연구기관 협동연구 융복합성 강화 등을 위하여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업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 97
14. 청년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고용 연계 부족 등 기존의 형식적인 인턴
운영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청년인턴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98
15. 한국교육개발원 구청사 매각 관련 애로사항을 담당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99
16. 저조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100
17. 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NFIS) 실효성 담보를 위한 연구기관 참여
독려를 촉구할 것 101
18.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102
19. 세종국책단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 103
20. 저임금구조형 연구기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05

21.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106
22.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연구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 점에서의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방 안을 검토할 것	107
23.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국부펀드 연구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인천· 김포공항 기능 통합 관련 연구를 기획·추진할 것	108
2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109
25. 초빙연구원 운용 제도 및 학회 연회비 지원 규모 관리 등 전체적인 연구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110
26. 소득양극화·세대별 자산 양극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기획·추진 할 것	111
27. 국가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미래연구를 정치중립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112
28. 금융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금융기본권 관련 협동연구를 추진 할 것	113
29. 융복합 협동연구 활성화와 연구기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을 상향하고 성과 인센티브가 참여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114
30.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협동연구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점검하여 필요 시 예산 증액 방안 등을 추진할 것 ..	115

3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외활동 신고 체계화 및 정례 교육을 추진할 것 .. 116
32. 연구기관에서 운용 중인 시용제도의 폐지·축소 혹은 고용계약제 폐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117
33. 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118
34. 국제 신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산업·통상·외교·안보정책 등)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해 구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 119
35.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대응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 120
36. 방위산업센터장의 KAI 자문계약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121
37.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 122
38. 재정확대와 긴축재정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이 오해
없이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123
39.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검토할 것 124
40.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125
41. 구 청사 매각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 126

42.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긴급 현안(단계적 일상회복 등)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127
43. 전 기관장 비위행위 수습 마무리 진행 및 공익신고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	129
44. 연구기관 행사 개최 시 정치 편향적 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양할 것	130
45. 보훈섬김이 등 가사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	13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 지방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수익 구조, 자산 관리회사 출자,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배 시 제재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 발표('21.11), 도시개발법 개정('21.12)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22.3~) -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 민·관 공동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고려사항 및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 규정 - 공공시행자가 선정된 민간참여자과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 절차 신설 - 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승인받은 협약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조치 명령 가능 《향후추진계획》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완료('22.6)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 국무총리 산하 불로소득 환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연구하는 등 부동산 개발 이익 공공환수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 발표('21.11), 도시개발법 개정('21.12) 및 하위 법령 개정 추진 중('22.3~) -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이윤 상한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 민·관 공동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고려사항 및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 규정 - 공공시행자가 선정된 민간참여자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 절차 신설 -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승인받은 협약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조치 명령 가능 《향후추진계획》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 건설사(임대사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는 뉴스테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뉴스테이의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실현 최소화를 위해 융자금리 조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조정, 초과이익 환수 방안(기금 배당비율 상향 등) 마련 등 조치완료('21년) 《향후추진계획》 ○ 필요시 제도개선방안 추가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 100%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방공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21.4, 조응천 의원), 국회 계류 중 * 부동산 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 검증·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및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 수행 《향후추진계획》 ○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와 유사 규제자유특구간 협의체(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 등 상생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실증특례비(약1.2억원)를 지원하고, 책임보험료(보험료의 50%, 1,500만원 한도)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등 지원제도를 운영중 - 특히, 실증특례비, 책임보험료의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중 《향후추진계획》 ○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설정 등을 통해 신속 승인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서민재산 보호를 위한 3개분야 대책(‘21.12.2 발표)」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후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추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준비단* 출범(‘22.4월) *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금감원 등 《향후추진계획》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추진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 신용카드 또는 여권과 결합된 형태의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음 * (2차 접종) △한국 86.9% △일본 81.1% △영국 73.3% △미국 66.8% ('22.6.16.) 《향후추진계획》 ○ 현재 추진 중인 만 60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8.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식적 업종 분류보다는 업종 현황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업종별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최근 유행 감소세, 민생경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22.4.18~) * <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1차: 3.15~20) 운영시간 연장(23시) (2차: 3.21~4.3) 사적모임 확대(8인) (3차: 4.4~17) 운영시간 연장(24시) 사적모임 확대(10인) (4차: 4.18~) 거리두기 조치 해제 《향후추진계획》 ○ 향후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주무부처(복지부·질병청)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 가족 인건비 등을 고려한 보상 방안, 영업제한 외 조치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임대료 비중* 100% 반영 * 매출액 중 인건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가족 인건비) 인건비 절감으로 영업이익 상승 → 손실보상금 산정 시 반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21.12~’22.2월) * 영업제한 업종 및 매출감소 일반 업종 대상 《향후추진계획》 ○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 (’22.5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600~1,000만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0. 코로나19 일상회복 준비 상황을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오미크론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 국제선 항공기 정상화(6.8) 등 자율방역 기반의 일상회복 추진중 《향후추진계획》 ○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토·시행해 나갈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1. 병원 전달체계 문제 해소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취약계층 대상별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운영 중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21.9월) -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21.5월, 광주·세종) 《향후추진계획》 ○ 대상별 주치의 제도 도입 지속 추진(국정과제) - 아동주치의 시범사업('22.下) -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사업('23.下) -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25)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우울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심리지원단과 마음건강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우울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응할 것	《시정처리결과》 ○ ‘통합심리지원단(’20.1.29.~)’ 운영을 통해 확진자·격리자·유가족 등에게 약 1,353만 건의 심리지원(’20.2~’21.12) ○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대응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신규 인력** 확충 * (센터) ’18년 251개 → ’21년 260개 → ’22년 271개 ** (인력) ’20년 508명 → ’21년 205명 → ’22년 300명 ○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 등 적극 대응 *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대상 - △자율규제 요청 4,529건 △방심위 심의의뢰 185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4,714건의 게시물에 대해 조치 요청(’21.2.19~’22.6.9.)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심리지원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접근성 향상 ○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정신건강 검진체계* 도입 추진(’23) * (도입안) △대상 확대 △주기 단축 △검진 항목 다양화 △사후관리 강화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로 방문서비스 활성화(’21년 32대→’22 50대) ○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여 대응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3. 심리상담 통합법제 마련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나 입법 계획을 제출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복지부에서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22.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리서비스 자격제도 관련 유관 학회·단체들 간 갈등상황 분석 - 자격제도를 포함하여 서비스 유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향후추진계획》 ○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협의체 논의 진행상황 지속 점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4. 행정안전부의 내고장 알리미에 기초자치 단체의 사례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상 행정 우수사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합동평가는 기초지자체 실적을 포괄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 - 광역별로 구분해 우수사례를 게재하나 내용상 기초지자체 사례도 既포함 《향후추진계획》 ○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상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별도 게재 여부를 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5.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후유증 관리를 통한 일상 복귀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은 보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할 범부처 통합 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증상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조사를 추진할 계획('22년, 55억 원) ○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완적 의료비 지원('22.2월) △심근염·심낭염 발생 시 인과성 추가 인정('22.3.14, '22.5.24) 등 《향후추진계획》 ○ 후유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계획 ○ 백신 이상반응 상담·보상 등을 위한 전담 기구로 ^(가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6. 중증환자 치료실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협상한 공공의료 확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할 것	《시정처리결과》 ○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3,955병상 확보(중증 1,537/준중증 2,418, '22.6.14)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공공병원 22개소 신·증축 추진, 책임의료기관(권역16, 지역42) 지정, 권역감염병전문병원 5개소 지정 《향후추진계획》 ○ 노정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7.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해운법 관련 공정거래 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갈등, 학교급식법 관련 교육부·식약처·환경부간 갈등을 포함하여, 입법 또는 정책 집행에 있어 부처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의 통합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중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갈등현안 발굴·대응(국조실) - 집중관리 갈등과제 선정·관리 - 중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부처·지자체·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 사안별 해결 - 갈등관리정책협의회(국조실장 주재) 운영, 주요 갈등현안 추진상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의·조정 ○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국정협의체(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차관회의 등)를 통해 협의·조정 실시 < 참 고 >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관련 법안 이견 조정('21.11) ◆ 해운법 : 관련 논란 확대 시 해수부·공정위 간 협의 지원 검토(국조실) ◆ 학교급식법 : 법제처(입법정책협의회) 조정 중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 선정 및 집중관리 ○ 주요 국정협의체(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차관회의 등)를 통한 정책 조정 활성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쟁당국과 소관부처의 갈등을 신속 하게 조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정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21.10.25.)하고 수차례 국장급 협의를 실시 ○ '22221.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향후추진계획》 ○ 향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19. 갈등관리 시한제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등 부처간 갈등이 해소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공갈등은 유형이 다양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어 갈등양상 전개의 예측이 어려움 - 또한 시한을 특정할 경우 당사자간의 충분한 합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갈등관리 시한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 필요 ○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관리 - 집중관리 갈등과제 중 해소·완화과제는 소관부처 자체 관리로 전환 → 갈등 재발 시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관리 < 참 고 > ◆ 청년정책 : 청년기본법 시행(’20.8),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 신설(’21.6), 청년정책 추진 중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 선정 및 집중관리 ○ 갈등 해소·완화 과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0. 반구대암각화와 광주군공항 등 갈등과제로 선정된 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결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공갈등은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 → 페널티 도입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참 고 > ◆(반구대암각화) 수위조절용 ‘사연댐 수문설치’ 합의 및 추진계획 확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1.10) ◆(광주군공항)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및 협의 지속 ○ 각 부처별 갈등관리 활성화를 위해 갈등과제 해결 및 갈등관리제도 운영 성과를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향후추진계획》 ○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주요 갈등현안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관리 - 다자간 협의체 구성, 독립적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 공론화 등 갈등 해결 기제 적극 활용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1.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갈등 사례 및 회의록과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성과, 법적 근거, OECD 주요국 사례를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부부처 갈등 사례 및 회의록과 국무조정실의 갈등조정 성과 ※ 해당 자료 기 제출 완료 ('21.11.) ○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 ... 갈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둔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OECD 주요국 사례 ※ 해당 자료 기 제출 완료 ('21.11.) - 미국, 일본, 프랑스 사례 포함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2. 화력발전소 건설재검토 및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간 중재를 계속하는 등 해결 완료 항목에 대한 진행상황 재검검을 포함한 갈등과제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 중점관리 ○ 갈등 해소·완화 과제는 부처 자체 관리, 국조실 지속 모니터링 → 갈등 재발 및 확대 시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재선정·관리 < 참 고 > ◆ 화력발전소 건설재검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제는 계획수립, 재결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 집중관리 갈등과제에서 제외, 부처관리로 전환 → 향후 갈등 재발 및 확산 시 집중관리 갈등과제 재포함 검토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 선정 및 집중관리 ○ 갈등 해소·완화 과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3. 발전사 관련 노무비를 전수조사하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이행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전정비 업무의 한전 KPS로의 재공영화 및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발전공기업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 중이며, 한전KPS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 중('22.1~) -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점검 보고서 제출 완료('22.1) ○ 한전KPS로의 발전정비 공영화·정규직화는 노·사 갈등, 민사 소송 분쟁 등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향후 협력업체 신규 계약 시에도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및 지속 점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4. 온라인청년센터에 대한 청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온라인청년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추진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내용 반영 - 청년에게 정책 정보 확인, 자격 검증,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 고도화 추진 - 자격검증 및 신청 기능이 고도화될 경우 이용자 추가 유입으로 플랫폼 인지도 및 정책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고용부 중심으로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사업 추진중 《향후추진계획》 ○ 온라인 청년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세부계획 마련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5.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충분히 위촉하고, 위촉 시 청년임을 고려하여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기회를 부여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를 통해 56개 위원회를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로 추가 지정 * 총 857개 정부위원회 중 190개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 '21년 말 기준 78개 위원회에서 122명의 청년위촉 ○ (청년정책책임관)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책임관은 소관 기관 청년정책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국조실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중 -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주요 부처(9개)*의 업무실적 점검·공유(매주), 전담부처 협의회 개최(매월)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유지 * 기재·국토·중기·고용·교육·행안·복지·문화·금융 - 또한 각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旣 지정, 국조실-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소통·정책 협력 강화 《향후추진계획》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청년의 경우 위촉위원 자격요건 완화방안 마련 및 위원회 청년위촉 현황 점검 - 청년인재 발굴·공동 활용을 위해 청년 인재 DB 구축 추진 ○ 관계부처·지자체 정례협의 지속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6. 기획재정부에 청년 인턴 업무를 일임하기보다 청년 정책조정실이 청년 인턴 현황 관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년정책조정실과 9개 부처가 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 등 17개 과제를 포함한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수립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 발표('21.11.30) 《향후추진계획》 ○ 청년정책전담조직 협의회 정기 개최(매월)를 통해 청년 인턴 내실화 추진상황 점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7. 은행 채용 비리 등 청년 채용 문제 해결 방안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등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채용) 「채용절차법」 운영중이며,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정 과제 수립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내용 반영 ○ (주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지원대책 시행 * 청년 주택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 《향후추진계획》 ○ 채용절차법에 따른 집중 지도·점검기간 운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추진 -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채용모델 개발보급, 중소기업 채용 담당자 교육 등 확대 예정 ○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맞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진행 토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 *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청약제도 개선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8.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년 친화기업 ESG 지원사업을 신설, 청년이 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에 관련 예산을 지원(대기업: 매칭 50% 지원, 중소기업: 전액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21.12월) - 법 유효기간 연장(23년말) 《향후추진계획》 ○ 청년고용포럼 등 매월 개최, 청년 고용 인센티브 관련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검토할 계획 ○ '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개최 예정(6.24.)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9.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정하여 밝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21.12.28, 국조실장 주재)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 관련 정부 대응상황 등 점검 ○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초 ‘22년부터 예정되어있던 과세시점을 1년 유예하여 ‘23년부터 과세토록 소득세법 개정(‘21.12월) - 기재부를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중임 《향후추진계획》 ○ 가상자산업법 관련,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등 전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0.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점검 조치 실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추진 방향 공유 및 논의('22.1월) * '22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 - ①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②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③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④공직사회 신뢰 제고 《향후추진계획》 ○ 부처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상시 공직비위 감찰, 계기별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노력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1.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프로세스를 개정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자체신고 및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위해 청렴포털을 확장하여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 등록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신고 내용 및 범위가 불일치하는 등 재산 등록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결과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활용 불가 의견 《향후추진계획》 ○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개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2. 부패예방추진단의 군납 분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방·보훈 복지시설에 대한 계약·운영 등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 방안(31개) 마련하여 소관부처 통보('21. 12) * 직접생산확인 위반업체 1곳 수사의뢰('22. 3.) ○ 피복류 등 군납에 대한 불량 확인 및 품질보증, 구체적인 점검계획 수립은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으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별도 점검계획 수립할 사안은 아님 *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윤주경 의원실과 협의 완료('22. 5.) 《향후추진계획》 ○ 언론보도 상시 확인 등을 통해 군납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3.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사와 감찰 계획을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무위 등 국회 상임위 국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관* 대상, 권익위·기재부·행안부 합동 점검반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7개 - 조사결과 채용과정상 관련 규정 위배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방공기업 설치·운영은 지자체 자치사무이고, 지방공기업의 비위에 대한 감사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 ○ 추후 정부합동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및 징계 등 처분 요구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4.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신혼부부 주거안정,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양육환경 개선, 주거안정 등 저출산 완화 정책 추진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첫만남이용권(20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시행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300만원 지급(생후 12개월 내 자녀 대상)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정책도 추진중 《향후추진계획》 ○ 청년·신혼부부 원가주택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5.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인한 국가부채 과소계산 문제를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부는 국제기준(PSDS*)에 따라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실적기준으로 매년 산출하여 공개 중 *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국제 비교가 가능한 채무정보 산출을 위해 IMF, OECD 등이 공동 제정한 채무 통계 작성 지침서 ○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D1)는 예·결산,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관리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와는 별도로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산출 《향후추진계획》 ○ '2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집계 중으로 '22.12월 경 공개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6.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여성가족부,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 합의서 양식 수정* 및 의원실에 별도 설명('21.10) * 피해자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막는 문구 삭제 《향후추진계획》 ○ 법령개정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개정(~'22.1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7. 국책연구기관 지정수탁제 도입 및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의견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정수탁제 도입, 중앙행정기관 연구 의견서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21.7, 홍성국 의원) ※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21.9) 《향후추진계획》 ○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 지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8.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하여 외환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 공식화('21.11월 런던IR) ○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등 외환 거래체계 선진화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계획 발표 ('22.1월 기재부) ○ 기재부-MSCI 면담(22.4월)을 통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소개 및 선진국지수 편입의 당위성 설명, 선진국지수 편입 사전단계로서 관찰대상(Review List)등재 요청 《향후추진계획》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지속 추진 ○ 외환시장 선진화 등 외환거래체계 개편방향 마련 (연내)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39.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대통령·총리 간 주례회동,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운영 -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추진 ○ 국무위원 간담회('21.11.28) 등을 개최하여 총리의 내각 통할 및 부처간 협업 지원 《향후추진계획》 ○ 국정과제¹²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中 책임총리 관련 내용 포함 - 총리의 국정운영 책임성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0.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1.11)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내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 계획」 수립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 개최('22.5.31) ○ 산업부 內 부산박람회 전담팀 신설하고 인력 증원('22.3) ○ 부산박람회 유치 관련 예산 증액('21년 39.3억원 → '22년 170억) 《향후추진계획》 ○ 범정부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22.7) - 민관합동으로 전방위 유치노력 강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1.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부는 ‘22년 두차례 추경을 통해 국회와 협의하여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 (2차 추경 기준)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택시·버스기사 300만원 등 《향후추진계획》 ○ 향후 필요시 합리적 지원방안 검토 * 의원실 既제출(‘21.10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2. 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내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도시철도 무임수송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국토부 검토) * 용역기간: '22.3~'22.11, 용역비: 5억원, 용역기관: 대한교통학회 《향후추진계획》 ○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개선방안 마련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학교 복합개발에 관한 범부처 논의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마련’(21.11.11) *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교부 기준, 교육청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 원활한 학교 복합화 추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투자심사** 추진 중 ** 공동투자심사를 통해 신설 학교 10교 (5개 지역)에 복합화 시설 추진(21~224월) 《향후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년 시행)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특례* 검토(대통령령 제정)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설립 및 투자심사 요건 완화, 학교 복합화, 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지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4. 산업별 기술인재 수요 전망을 교육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21.11.16.), ‘범부처 인재양성 실무협의체’ 운영(’21.12~’22) 등 추진 《향후추진계획》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 구성 및 운영(’22.6월~) - 범부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 -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체계 구축 위한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5. 지방재정 교부금과 고등교육 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각종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교육청, 전문가 등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중 *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1차 1.24., 2차 3.7.), 지방교육재정 포럼(1차 1.24., 2차 2.23.)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6.8.) 《향후추진계획》 ○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6.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정부 재정 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추진한 민자사업의 경우, 지자체-민자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추진계획》 ○ 추후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추진 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7.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약과 국정과제 등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반영 <table><tr><td></td><td>주요 내용</td></tr><tr><td>대선 공약 (5개)</td><td>(부산) KDB산업은행 / (대전) 방위사업청 (전북) 금융기관 / (충남) 탄소중립·문화체육 분야 / (강원) 환경·안보·농임업 분야</td></tr><tr><td>110대 국정 과제</td><td>약속08-국정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실천2(강소도시와 낙후지역) 內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포함</td></tr><tr><td>지균 특위 15대 과제</td><td>¹⁾공공기관 추가이전, ²⁾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³⁾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td></tr></table> 《향후추진계획》 ○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		주요 내용	대선 공약 (5개)	(부산) KDB산업은행 / (대전) 방위사업청 (전북) 금융기관 / (충남) 탄소중립·문화체육 분야 / (강원)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110대 국정 과제	약속08-국정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실천2(강소도시와 낙후지역) 內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포함	지균 특위 15대 과제	¹⁾ 공공기관 추가이전, ²⁾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³⁾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주요 내용									
대선 공약 (5개)	(부산) KDB산업은행 / (대전) 방위사업청 (전북) 금융기관 / (충남) 탄소중립·문화체육 분야 / (강원)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110대 국정 과제	약속08-국정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실천2(강소도시와 낙후지역) 內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포함									
지균 특위 15대 과제	¹⁾ 공공기관 추가이전, ²⁾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³⁾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8. 국무조정실 내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과 달리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공무원의 보수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과 달리 지급된 법정수당 차액분을 추가 지급 완료('22.1월) ○ 공무원 보수규정을 법정기준에 맞게 개정해 '22년부터 운영 중 - (초근수당) 시간당 단가를 9급 공무원 기준단가에서 통상임금 비례분으로 변경 - (연가보상비) 기본급 일정비율 공제 없이 전체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4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 오염원전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철저히 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적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며, 수산물이력제 제도로 보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원전 오염수 관련 양자·다자 회의에서 국제사회 관심 환기 및 우리 입장 설명, 국제 공동 대응 중 - 우리 전문가·연구기관(KINS) IAEA 검증활동에 참여 중 ○ 현재 일본산 수산물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 중 - 국적세탁 방지를 위해 일반 유통·판매업체(모든 수산물), 음식점(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단속 중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의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관리 중 《향후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 단속 - (특별점검)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외형적으로 유사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10대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특별점검 추진 - (품목 확대) 수입량, 국내 소비량, 소비자 민감도 등을 고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15개→20개) 추진('22.下)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유통이력신고 의무 대상품목으로 추가(17개→21개)·관리('22.下)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0.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구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1.6월 의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추진 - 구미 해평취수장 대구·경북 공동이용과 구미지역 상생방안*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정 체결('22.4.4) * △하수처리장 개선·증설 및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지원 협력 등 ** 국조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수공 《향후추진계획》 ○ 국조실 주관 협의회를 운영, 상생발전 방안 이행상황 등 점검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1. 한강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할 것	《시정처리결과》 ○ 환경부, 해수부 모두 통합적인 하구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 중 《향후추진계획》 ○ 통합적인 하구 보전·관리 과정 에서 향후 이견이 있는 경우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 통해 협업방안 모색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2.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에 신경을 쓸 것	《시정처리결과》 ○ 「디지털포용법」(‘21.1.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22.1.13)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배움터 전국 900개소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활용 교육 확대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3.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시 석탄발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 민간사업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재무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NDC확정시(‘21.10.27)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 도입 추가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 추진 중 - 석탄발전 폐지 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이 국회 계류(‘20.11.26. 상정) 중 《향후추진계획》 ○ 10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석탄발전 감축 기조 유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4.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및 2030 NDC 수립 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 NDC·시나리오 관련 의견수렴 진행 * 각계각층의 의견서 접수(94개 단체), 협의체 간담회(총 20회) 및 탄소중립 시민회의 대토론회 개최('21.8~9), 2030 NDC 온라인 토론회(유튜브 중계, '21.10.8)로 국민 홍보 및 의견 수렴 《향후추진계획》 ○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NDC 달성방안 마련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5.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ESG 로드맵(지표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확산 지원 등)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21.12월) * 공시·환경(E)·사회(S), 지배구조(G) 4개 분야 총 61개 문항 제시 및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 선별 제시 ○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사내전문가 육성 과정’, ‘찾아가는 지속가능경영 교육’ 등 지원 《향후추진계획》 ○ ‘중소·중견기업 K-ESG 가이드라인’ 마련(‘22년 하반기)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관련 교육 지속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6. 수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홍보와 부처 간 수소충전소 정책 조정 등에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홍보) 수소경제위 개최, 미디어 홍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 방식으로 수소경제 인식 제고 추진 - (수소위) 총리주재 제4차 수소경제위 개최('21.11)를 통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발표 - (미디어) 산업부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TV다큐 방영, 외신 프레스 투어('22.5) 등 추진 - (국민소통) 퀴즈쇼·공모전·SNS 이벤트 및 주민설명회·간담회('21년 총 14회),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착공식('21.11) 등 안전성 홍보 ○ (부처협의) 그린에너지정책협의회('21.11), 수소경제위('21.11)를 통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 및 정책조율 《향후추진계획》 ○ 제5차 수소경제위 개최('22.下) 계기 부처 간 정책협의 강화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집중홍보 추진 ○ 공모전·설문조사 등 온·오프라인 소통강화로 국민 수용성 제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7. LH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이 축소되어 청년들이 피해를 입거나 기능 분리로 인한 지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21.12.29)를 거쳐 LH 신규채용 추진완료 - 신규채용 모집공고('21.12.30), 최종 합격자 발표('22.3.30) * 채용인원 : 250명(지역인재 50명) 《향후추진계획》 ○ 향후 신규채용은 LH 2차 인적 조정 상황 및 공공기관 인력 운영계획·LH채용계획에 맞춰 진행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8. 이동통신 5G 서비스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소비자정책 위원회에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8차 소비자정책위원회('21.12.27.)에 5G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 (과기정통부 보고안건) - 5G 품질개선·커버리지 확대, 요금제·단말 선택권 확대, 유통점 불법행위 방지 등 추진하기로 결정 《향후추진계획》 ○ 5G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 지속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59. 학교 공기 질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교사내 공기질 관리 강화('21.12.28. 개정, '22.6.29. 시행)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횟수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 확대(연 1회 → 연 2회 이상) ○ 『2022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개정 안내('22.1.12.) - 외부 전문업체 공기질 점검 시, 점검일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및 학교 안내 (국정감사 지적내용 포함) 《향후추진계획》 ○ '22년도 상반기 공기질 정기점검 실적 파악 및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안내(8월) ○ 하반기 공기질 정기 점검 전, 외부 전문업체와 점검일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도록 재안내(11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0.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공정경제3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공정위) * '21.12.2.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시 감사위원 분리선출 결과 발표 《향후추진계획》 ○ 의무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 지속 (공정위) ○ 관련 법 개정('20.12월)이후 법 적용 상황을 종합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법무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1.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관련 예산 반영 등 상황을 파악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예산 반영 상황 파악 및 반영 노력 - 예결위·외통위 위원 대상 자료 전달·방문설명('21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2. 타투에 관한 행정·사법의 충돌 및 부처와 의사협회간 입장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복지부,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21.9월~11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결과를 통해 문신업의 보건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위생 및 안전관리지침 등 마련 추진 《향후추진계획》 ○ 이용자 안전·건강 위협 및 공중위생저해* 등 제도공백으로 인한 문제점과 의료계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 시술 관리체계 개선 검토 * 피부질환·피부염 등 부작용 경험, 혈액오염 바늘·거즈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3. 스마트시티 등 관련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기구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 박스는 교통·ICT·산업·금융 등 각종 신산업과 관련되므로 다양한 규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민간합동)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추진 중 《향후추진계획》 ○ 필요한 경우 국조실에서 관계 부처 TF 등을 개최하여 이견을 조율하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4.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범죄 전담기구 또는 대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험사기 동향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금융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既운영중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손·생보험회 등 《향후추진계획》 ○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5.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범정부 합동 불법면허 대여 광고 특별단속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확인 의무화(여객자동차법 '21.12.7.개정, '23.6.8.시행) * 운전자격 확인 위반 시 처벌강화 (과태료 최대 50→500만원 상향) ※ 참고(여객자동차법) • 명의대여·알선 시 처벌('21.1.시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위반 시 처벌 강화('21.3.시행) * 과태료 최대 50→500만원 상향 • 임대차계약서 상의 운전자 외 운전 금지 및 처벌('22.1.시행) * 제3자 운전 시 과태료 300~500만원 《향후추진계획》 ○ 개정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 등 운영상황 점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6.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개정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조정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 '23년 균특회계 편성지침 개정('22.4) * 낙후도 지표(지방소득세,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지수) 비중 상향 (현행 70% → 변경 75%, +5%p) ** 인구소멸지역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5%p) 적용 《향후추진계획》 ○ '23년 균특회계 예산 편성(~'22.8)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7. 경찰 지도부와 현장경찰 간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가질 것	《시정처리결과》 ○ 상급기관-직협 간 소통강화를 위해 시·도청 등 직협 소통위원* 선발·운영('21. 10월~) * 본청(1명), 부속기관(1명), 시·도 경찰청(18명) 등 총 20명 선발 - 경찰청장 간담회('21.11.19.), 경무 인사기획관 간담회('22.3.11.) 개최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직협법 개정* 등 감안, 연합협의회 지원 등 소통 강화 *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직급제한(6급·경감이하) 폐지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 가능 근거 명시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소통이 쌍방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시정처리결과》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환경부-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간 이견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의견조율 및 시행령 개정('21.5.11)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22.6.10)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69.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하고 협의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계부채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시행('21.10.26.)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 전세대출의 가계부채 총량한도 예외 인정, 총량규제에 따른 집단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 중금리·서민 금융 공급 확대 등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등 발표*('22.5.30.)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內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청년층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확대 등 《향후추진계획》 ○ 상기 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 등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계부처·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0.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쏘 국정과제 이행상황 실시간 관리 중 ○ 매분기 국조실 주관 종합점검을 실시, 이행상황 주기적 확인 및 부처 이행 독려 중 - 종합점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 지연과제는 부처별 조치계획 수립 후 중점 관리 《향후추진계획》 ○ 과정관리를 더욱 강화, 1·3분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점검을 2·4분기 실시, 개선방안 등 도출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1.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하여 정부광고 대행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 향후 개선계획 관련 의원실 설명 완료 (문체부, '21.11월) - 정부광고 수수료 활용 시 방송진흥 지원 비중 지속 확대 - 정부광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문성 강화 등 《향후추진계획》 ○ 정부광고 제도 개선 추진상황 지속 점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2. 중국 헝다그룹 파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등)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헝다그룹 등 잠재적 국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 지속 * 거시경제금융회의('21.9.23), 금융위원장 전문가 간담회('21.9.27), 금융시장 점검 회의('21.10.7) 등 《향후추진계획》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디레버리징 진행과정에서 헝다그룹 등 시장 불안 요인 발생 가능성이 상존 → 관계기관 및 시장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금융상황 지속 모니터링, 국내 파급효과·대응방향 선제적 점검 등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 노력 지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3. 범정부 차원에서 소공인에 대한 정책 비중을 대폭 높이고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공방 구축, 클린 제조환경 지원, 소공인 특화센터 설치’ 등 소공인 특화 지원 정책 추진 《향후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 -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예정 (중기부, ’22.下)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4. 대리운전자의 중복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시정처리결과》 ○ 21.12월 업계·노동계·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공정위·국토부 참여) ○ 대리운전업(자유업)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보험관련 내용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 * 대리운전 중복보험 문제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의원실 방문 설명('22.3.7. 공정위) 《향후추진계획》 ○ 노조 등의 관련 요구가 있는 경우 보험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을 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5. 보훈병원에 대한 야간간호료 등 추가 인건비 지원 관련 기관 안내 및 개선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훈병원 노사합의('21.10.6)에 따라 야간간호관리료 지급중 * '21.7.1~'22.6.30 : 1만원 * '22.7.1~'23.6.30 : 2만원 * '23.7.1 이후 : 3만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6.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의혹 관련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타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22.6.16) *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7.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시정처리결과》 ○ '18년 6월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심의 하였고, 이후 분과위원회는 3년간 12회 개최하였음 ○ '20년 6월 민간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11월에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보훈 안전망 강화 등 9건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였음 * '20년 11월과 '21년 6월 국무총리 주관 전체회의 개최를 국조실에 건의 《향후추진계획》 ○ 올해 임기만료에 따라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새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른 보훈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관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하겠음 ○ 향후 국가보훈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8.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20. 2.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대구시에서도 건립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함 《향후추진계획》 ○ 추진위원회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면 - 국가보훈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을 검토하겠음 * 총사업비의 30%, 부지매입비 제외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무조정실	79.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 부처를 변경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행안부·문화부·보훈처, '21.10.8)를 개최했으나, - 국경일 소관부처 이관은 국경일의 상징성과 부처 협업체계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결론 ※ 윤주경 의원실에 논의결과 보고 ('21.10.14, 행안부) 《향후추진계획》 ○ 부처간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조 하에 국경일 행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공백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 소관 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연구 비중을 줄여야 하고, 지정수탁제 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수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능률성과급 총량제’를 도입('19년)하여, 적정한 수탁연구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정수탁제 관련 법안 개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속 *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1.7.1.) 및 정무위 회부('21.7.2.)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정무위) 상정('21.9.16.), 계류 중 《향후추진계획》 ○ 중장기 정책연구 특성 고려한 연속성 및 공공성 확보, 국책연구기관 수탁사업 여건 개선, 행정효율화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수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 정책연구결과를 민간·언론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관점에서 성과 홍보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사이트 개편 및 서비스 고도화 지속 * 「NKIS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21.6.~9) ○ 언론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진 - 주무부처 출입기자단 대상 홍보 강화, 유형·분야별 성과확산 전략 이행, 언론 협업 콘텐츠 제작 확산 ○ 연구회 협동연구 성과의 체계적 확산 -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가독성 높은 협동연구 총서 단행본 제작·발간('21.2~) - 정책고객(정책입안·수행자) 대상 핵심내용 요약 Brief 발간·배포('22.5~) ○ 학회, 민간 등과의 공동학술회의 기획시 유사주제관련 정책연구 수행 연구자가 발표·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성과 홍보 제고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22.1.6~'22.1.20.) 한국행정학회('22.6.22.~'22.6.24.), 거버넌스센터('22.6.23), 한중사회과학학회('22.6.30): 세션 내 관련 협동연구 수행 연구자 참여 《향후추진계획》 ○ 정책연구 성과물의 고객 개념 세분화·명확화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정책고객, 일반국민 등 ○ 고객 유형별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맞춤형 성과확산·홍보 전략 수립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운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공통 기준’ 제정·통보 완료(’20.4.) -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21.1. 시행)부터 저자표기 기준 관련 규정 유무와 준수여부 평가 실시 *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지표’ - 국정감사(’21.10.) 직후 연구기관 현황 조사 결과, 자체 저자표시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향후추진계획》 ○ 연구기관 평가 반영 완료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 제도 관리·운영 추진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4.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재 연구기관장 선임 시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임 실시 － 또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회 정관* 등에 이를 규정 * 「정부출연기관법」 제31조의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4조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관계법령·규정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정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5. 기관별 과도한 법인카드 발급을 지양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출연(연) 법인카드 운영 현황 자체 점검 실시 - 법인카드 발급(배부) 및 반납(회수), 법인카드 관리체계, 법인카드 사용 및 모니터링 등 자체점검 실시('22.2.) * 자료 제출 요청('22.2) → 취합 및 정리('22.2) → 감사제도개선 TF 논의('22.3) ○ 출연(연) 법인카드 투명성 강화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모든 기관 클린카드(Clean Card) 사용 및 자체 규정 준수 - 자체 모니터링 이행 후 연구회 통보 등 관리체계 강화 - 출연(연) 직원 대상 법인카드 교육 강화 등 《향후추진계획》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필요 시 관련 규정·지침 개정 추가 검토 - '22년도 하반기('22.9.예정)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 출연(연) 법인카드 운영 현황 등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노력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6. 부동산 관련 정보 취급 기관(국토·KDI·교통·조세· 환경)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 등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법적 의무사항 이행 및 제도정비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통제 및 관리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절차 및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이행 - 기관별 자체 제도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화하여 투기 행위 예방 *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등 ('21.11.~12.) 《향후추진계획》 ○ 부동산 정보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강화 노력 지속 ○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 제도도입 취지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추진 * 감사 실무교육, 윤리담당자 직무교육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7. 공동구매 방안 모색 등 국내외 학술지 플랫폼 활용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 업체(누리미디어)와 오픈 액세스 및 국가정책연구포털(NKIS)-DBpia 데이터연계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의 실시('21.12.21.(화)) ○ 국가지식정보 공유 및 국가전략 연구플랫폼 등의 활용을 위한 국회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22.6.20.(월)) 《향후추진계획》 ○ 연구기관 현황 조사·의견수렴 및 관련 업체(DBpia, KISS 등)와의 오픈액세스 관련 협상 지속 추진 예정(~'22. 12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8. 이사회 구성 시 정부 관료 과다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장 선임 및 연구원 기능을 정상화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회 이사회는 「정부출연기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연직이사는 8명 - 이사장(1명)을 제외하고 당연직이사(정부이사)와 선임직이사(민간이사)는 각 8명씩 동수 《향후추진계획》 ○ 「정부출연기관법」 상 연구회 이사 선임은 국무총리가 임명권자이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9. 문화 관련 연구원을 경제·인문 사회연구기관으로 소속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산업 등 인문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회 소속 편입을 위해서 관계정부부처·연구기관 협의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 논의 필요하여 지속 모니터링 ○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인문 분야 연구를 위해 지속적 노력 중 - 인문정책특별위원회 내 문화 전문가 보강('22.4) - 1차 공모과제 5건 중 문화 관련 과제 1건 선정(연구기간:'22.4~12) *과제명 : 한국 역사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방안 연구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한 시범 아이템 제작 《향후추진계획》 ○ 국회·관계정부부처·연구기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하에 필요시 체제편입논의 추진 ○ 인문정책연구사업 내 ①문화 다양성 관련 인문세미나(인문관통) 기획, ②2차 공모과제 선정시 '문화 예술 분야 인문정책 현황과 과제' 관련 주제 공모·심사 중 * 과제심사(6월) → 과제 추진(7월~) - 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 경주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0.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기본계획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소관 연구기관 관련 내용 공유('22.1 중순), 연구기관별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시 관련내용 공유·논의(~'22. 2 하순) 등을 통하여 법정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 검토 ※ 주요 검토사항 -(현황) 법정계획은 각 개별부처에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및 다수의 연구기관 등이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발표(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및 각 개별 부처별 산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법정계획의 세부과제 기획)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연구회 차원의 협의·조정을 통한 각 법정계획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에 한계 존재 ○ 연구기관 기획부서장 간담회 안건 논의('22.3.) 《향후추진계획》 ○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법정기본계획 현황 조사('22년)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 방안 검토·추진 * 필요 시 국무조정실 업무협의 추진 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1. 연구기관 연구진 투트랙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투트랙 제도 관련 연구기관 현황 파악 및 기관별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청, 연구회 내부검토 및 기관 권고(안) 마련('22.상반기) 《향후추진계획》 ○ 석사급 연구직이 박사학위 취득 시 박사급 연구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내부승진제도 마련 등 연구기관에 투트랙 제도 개선 권고 예정('22.하반기)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2. 연구기관 평가 시 변별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22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TF 구성('22.4~.) 및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 및 변별력 제고방안 마련 중 - 평가제도 개선 TF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등급 부여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단 구성·운영 개선 등 평가결과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22.6. 이사회 안건 상정예정 《향후추진계획》 ○ '22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통보('22.6. 하순) ○ 평가편람 설명회 개최('22.7.) ○ '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추진계획 수립('22.10.) ○ '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실시('23.1~4.)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3. 연구기관 협동연구 융복합성 강화 등을 위하여 참여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업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협동연구 사업계획 기획·심의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 진행 ○ 연구회는 국가이익의 중요성 관점에서 국가 전략과제(Ex. 경제안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를 선정, TF를 구성, 팀러닝·워크숍 등 사전 기획을 강화하여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융복합성 강화 《향후추진계획》 ○ 협동연구 융·복합성 강화와 결과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예정 -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주관·참여 기관 역할분담 명확화·연구회 심의 기능 강화 등 - 연구기관 검토·확인 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4. 청년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고용 연계 부족 등 기존의 형식적인 인턴 운영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청년인턴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십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2.2)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인턴십 운영 추진 - 가이드라인상 채용 시 인턴 수료자에게 가점 부여, 일부 채용 전형 면제 등 인턴경력 우대제도 마련 추진을 통한 정규직 채용 연계 강화 내용 반영 《향후추진계획》 ○ 인턴경력 우대제도 등 실효성 있는 청년인턴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5. 한국교육개발원 구청사 매각 관련 애로사항을 담당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진행 상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기관 부담 완화 방안 지원 - '22년 출연금 정부 심의시 종전 부동산에 대한 기관 부담분(407백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반영 완료 【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경과 】 개발제한구역 등 건물 및 토지 활용(공공주택) 관련 제약으로 인한 토지계약 불허가 처분으로 매각 추진에 난항('19.~'22.2.) * 입찰공고 유찰(30회, 계약체결 후 중도해지(2회 등)) 《향후추진계획》 ○ 매각 관련 모니터링 지속 및 교육研 지원방안 검토 예정 - 연구개발직립금을 활용한 재산세·차입금 이자상환 등 제도개선 검토 예정(~'22.8)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6. 저조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하여 적용할 것	《시정처리결과》 ○ 그간 계약직 중심으로 이뤄지던 채용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확대하여 고용안정화 및 의무 고용률 제고 위한 노력 지속 ○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 경영 목표에 장애인 채용 의무화 반영, 원격 및 재택근무 활용 적극 권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인턴십 등을 추 진하여 의무고용률 준수 위한 노력 지속 【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 <table><tr><th>구분</th><th>고용 인원(A)</th><th>의무 고용인원(B)</th><th>비율* (A/B)</th><th>미준수 기관</th></tr><tr><td>'19년</td><td>171.8</td><td>208</td><td>82.6%</td><td>15개</td></tr><tr><td>'20년</td><td>184.5</td><td>218</td><td>84.6%</td><td>13개</td></tr><tr><td>'21년</td><td>202.7</td><td>208</td><td>97.5%</td><td>10개</td></tr></table> * 100%에 근접할수록 의무고용률 준수를 의미 《향후추진계획》 ○ 사회 형평적(장애인·국가유공자) 채용 확대 위하여 적극 노력 － 연구기관 평가 반영, 관계기관 (지자체, 지역대학 등) 채용협력 강화 국가유공자·장애인 맞춤형 직무 발굴, 사회적 약자 배려 근무환경 개선 등	구분	고용 인원(A)	의무 고용인원(B)	비율* (A/B)	미준수 기관	'19년	171.8	208	82.6%	15개	'20년	184.5	218	84.6%	13개	'21년	202.7	208	97.5%	10개
구분	고용 인원(A)	의무 고용인원(B)	비율* (A/B)	미준수 기관																		
'19년	171.8	208	82.6%	15개																		
'20년	184.5	218	84.6%	13개																		
'21년	202.7	208	97.5%	10개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7. 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NFIS) 실효성 담보를 위한 연구기관 참여 독려를 촉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1년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관 확대 기반 마련 -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에 시스템 확대·배포 예정이며, 향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기관 참여율 제고 ○ 이용기관의 시스템 활용 사례 공유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도입 예정 기관의 시스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22.6.) * (참석기관) 연구회, 통일, 육아, 청소년, 해양, 형사, 건축, 여성, 교육 《향후추진계획》 ○ '22년 건축공간연구원, '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스템 배포 예정 * 27개 기관 중 6개 → 8개 기관 시스템 확대 배포 확정) ○ 디지털전환추진단 조직 신설('22.2.) 등 연구회 및 연구기관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NFIS)의 효용성 제고 및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8.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회 주관 국책연구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기획·운영*, 온라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상시 교육 운영체계 구축** * '21년 32개 교육과정, 총 65회 운영(전년 대비 67% 증가) * 국책연구기관 교육운영시스템, 미디어센터 운영('21.1.~)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 기획·개발을 통한 경제· 인문사회분야 R&D 전문 인력 양성 추진 * '22년 34개 교육과정, 총 74회 운영 예정 ○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직급체계 개편 등과 연동하여 연구기관 초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한국교통연구원, '21.4.~'22.3.)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9. 세종국책단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주차시설 별도 증축 제안 및 임시주차장 임차 연장 지속 - 세종 제2연구청사 완공 시점에 맞추어 ①제1청사 주차공간 여분 확보, ②제2청사 인근 주차장 용지에 주차타워 건립 제안 추진 등 ○ 연구단지 대중요통 여건 노력 병행 - 탄소중립·ESG경영 시대변화 추세 따라 대중교통 여건 개선·주차 이용자 수 자연감소 유도 병행 ○ 연구회 주관 국책연구기관 교육과정 추진 시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를 통한 법규 준수 문화 확립 * '21년 컴플라이언스 교육 현황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내용</th></tr><tr><td>신입구성원 과정('21.3., 11.)</td><td>- 관계법령·정관, 공공계약법, 임직원 행동강령,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연구윤리 등</td></tr><tr><td>신임기관장 리더십 과정('21.2. 5, 9, 12)</td><td>- 관계법령·정관·운영표준지침,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등</td></tr><tr><td>감사역량 강화 과정('21.6., 10.)</td><td>-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대외활동 기준 등</td></tr><tr><td>채용·인사노무 실무과정('21.4., 11.)</td><td>-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td></tr><tr><td>예산·결산지침 실무과정('21.5.)</td><td>-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td></tr><tr><td>계약 실무과정('21.4.)</td><td>- 시설공사계약·물품구매 계약·용역계약, 감사 사례</td></tr></table>	교육과정	교육내용	신입구성원 과정('21.3., 11.)	- 관계법령·정관, 공공계약법, 임직원 행동강령,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연구윤리 등	신임기관장 리더십 과정('21.2. 5, 9, 12)	- 관계법령·정관·운영표준지침,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등	감사역량 강화 과정('21.6., 10.)	-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대외활동 기준 등	채용·인사노무 실무과정('21.4., 11.)	-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	예산·결산지침 실무과정('21.5.)	-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	계약 실무과정('21.4.)	- 시설공사계약·물품구매 계약·용역계약, 감사 사례
교육과정	교육내용															
신입구성원 과정('21.3., 11.)	- 관계법령·정관, 공공계약법, 임직원 행동강령,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연구윤리 등															
신임기관장 리더십 과정('21.2. 5, 9, 12)	- 관계법령·정관·운영표준지침,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등															
감사역량 강화 과정('21.6., 10.)	- 출연(연) 감사 지적 사례, 대외활동 기준 등															
채용·인사노무 실무과정('21.4., 11.)	-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															
예산·결산지침 실무과정('21.5.)	-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															
계약 실무과정('21.4.)	- 시설공사계약·물품구매 계약·용역계약, 감사 사례															

		<table>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내용</th> </tr> <tr> <td>세무·회계 실무과정('21.7.)</td> <td>- 출연(연) 회계 및 세무 기준</td> </tr> <tr> <td>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과정 ('21.3., 7.)</td> <td>- 연구윤리 관련 법규, 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사항 등</td> </tr> </table>	교육과정	교육내용	세무·회계 실무과정('21.7.)	- 출연(연) 회계 및 세무 기준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과정 ('21.3., 7.)	- 연구윤리 관련 법규, 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사항 등
교육과정	교육내용							
세무·회계 실무과정('21.7.)	- 출연(연) 회계 및 세무 기준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과정 ('21.3., 7.)	- 연구윤리 관련 법규, 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사항 등							
		《향후추진계획》 ○ 주차공간 확보 노력 위한 관계 부처·기관 협의 지속 ○ 연구회 주관 국책연구기관 교육 과정 추진 시 컴플라이언스 교육 지속적으로 강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0. 저임금구조형 연구기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 추진 및 국회 협의·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저임금 해소요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 '22년 예산편성시 저임금 연구기관 대상 한시적 출연금 지원(638백만원) 《향후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구기관 임금격차 완화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한국교통연구원, '21.4.~'22.3.)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1.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공공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한 협동연구 과제 현황 검토 완료 - 관련 연구 현황(KDI 2건·국토 66건 등) ○ 연구기관 기획부서장 간담회 및 후속 논의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안건 논의('22.3.~'22.4.) - 사업계획·연구 중복성 등 검토·논의 중 《향후추진계획》 ○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공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한 협동연구 과제 추진을 위하여 유관연구기관(KDI·국토·조세 등)과 지속 협의·검토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2.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년정책 관련 협동연구 용역 결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진행 중 *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협동연구 (행정(研), '21.2~10.) ○ '21년 연구회 기획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로 청년정책 분야 협동연구 과제 수행 중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사(研), '21.10.~'22.8.) 《향후추진계획》 ○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출연연구기관 신설 등에 대한 절차에 따라 추진 지원 예정 ○ '22년 상반기 연구회 기획협동연구로 청년정책 분야 협동연구 과제 추진 中(보사(研) 주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3.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국부펀드 연구 및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인천· 김포공항 기능 통합 관련 연구를 기획·추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 주제와 연계된 연구기관과의 기연구내역 및 향후 연구 추진 방안 검토 - (국부펀드) 타 국가 국부펀드 활동 등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 - (공항 기능통합)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주변 지역 활성화 관련 연구 2건 수행 *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2019, 2020) 등 ○ 연구기관 기획부서장 간담회 및 후속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안건 논의('22.3.~'22.4.) - 사업계획·연구 중복성 등 검토·논의 중 《향후추진계획》 ○ 국부펀드, 인천·김포공항 기능 통합 관련 주제와 유관한 출연 연구기관과 정책연구 추진 방안 협의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협동 연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22년도 상반기 협동연구과제 수요조사 추진('22.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에서 2건의 과제 제안 ○ 내부검토 및 외부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동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1개 과제 선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동연구 과제 추진				
		<table><tr><th>과제명</th><th>연구기간</th></tr><tr><td>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인문사회 학제간 연구</td><td>2년</td></tr></table>	과제명	연구기간	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인문사회 학제간 연구	2년
		과제명	연구기간			
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인문사회 학제간 연구	2년					
《향후추진계획》 ○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과제 발굴 노력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5. 초빙연구원 운용 제도 및 학회 연회비 지원 규모 관리 등 전체적인 연구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기관별 초빙연구원 운용 현황 점검('21.12.) 결과 기관별 적정규모 운영 중임을 확인 * '17년~'21년 기관별 연 평균 0~5명 ○ 학회 연회비 경우 기관별 규정* 등에 따라 연구사업과 관계된 학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형태임을 확인 * 기관별 「연구사업비집행지침」 등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 초빙연구원 제도, 학회 연회비 지원 등이 적정한 규모 및 타당한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6. 소득양극화·세대별 자산 양극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기획·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불평등·양극화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기획 검토 - 최근 3년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양극화 관련 연구 총 11건 기수행 확인 ○ 연구기관 기획부서장 간담회 및 후속 논의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안건 논의('22.3.~'22.4.) - 사업계획·연구 중복성 등 검토·논의 중 《향후추진계획》 ○ 특정 분야 또는 코로나19 등의 제한을 넘어, 소득양극화·세대별 자산 양극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 기획·추진 검토 예정 ○ 22년도 하반기 협동연구 과제 수요조사('22.6.17~7.4) 등을 통해 정부부처, 국회, 소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된 과제 추진 검토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7. 국가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미래연구를 정치중립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지속적인 기획·조정을 위한 연구회 내 ‘국가전략연구센터’ 설치('22.2.) -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한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인적자원과 지식 산학관연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동연구 중장기 메가프로젝트 추진 중 * '20년 : 8개 과제, '21년 : 7개 과제 《향후추진계획》 ○ ^(가칭)국가전략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전략과제(경제안보, 규제혁신, 디지털전환 등)을 선정, 과제별 국가전략연구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전략방안 제시 예정 ○ 국가전략 협동연구 절차 신설을 통해 사전기획·중복성 검토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연구수행, 융복합적 연구성과, 통합적·국익우선 전략(안) 도출 기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8. 금융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금융기본권 관련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서민금융 안정 및 금융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동연구 수행 검토 《향후추진계획》 ○ 금융이용권, 금융기본권 개념 도입 등 금융 불평등 완화 관련 협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및 외부전문 연구기관과 논의하여 과제 추진 검토 - 정부부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22년도 하반기 연구회 기획 협동 연구 수요조사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9. 융복합 협동연구 활성화와 연구기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을 상향하고 성과 인센티브가 참여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회 협동연구 인건비 및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완료('21.11.) - 정부부처 협의 하에 인건비 비율을 정부부처 발주 수탁사업 인건비의 평균 수준인 25%로 상향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th></tr><tr><th>현행</th><th>개정</th></tr><tr><td colspan="2">합계</td><td>사업비 21%</td><td>사업비 36%</td></tr><tr><td rowspan="2">기관 간접비</td><td>인건비</td><td>사업비 10%</td><td>사업비 25%</td></tr><tr><td>경상비</td><td>사업비 6%</td><td>좌동</td></tr><tr><td colspan="2">연구자 간접비 (협동연구 성과 인센티브)</td><td>사업비 5%</td><td>좌동</td></tr></table> 《향후추진계획》 ○ 형평성 있는 성과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구분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현행	개정	합계		사업비 21%	사업비 36%	기관 간접비	인건비	사업비 10%	사업비 25%	경상비	사업비 6%	좌동	연구자 간접비 (협동연구 성과 인센티브)		사업비 5%	좌동
구분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현행	개정																				
합계		사업비 21%	사업비 36%																				
기관 간접비	인건비	사업비 10%	사업비 25%																				
	경상비	사업비 6%	좌동																				
연구자 간접비 (협동연구 성과 인센티브)		사업비 5%	좌동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0.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협동연구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점검하여 필요 시 예산 증액 방안 등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22년도 연구회 협동연구 예산 (안)은 전년 대비 7억 증액된 102억으로 국회 심의·확정 * 협동연구사업 출연금 예산: '19년 158억, '20년 100억, '21년 95억 《향후추진계획》 ○ '22. 6월 협동연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과제 수행 예정이며, '23년도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예정 - 특히, 경제안보,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전략 협동연구 추진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 지원 중 *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 협동연구 신규소요 필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외활동 신고 체계화 및 정례 교육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외활동 신고대상·신고기간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비, 대외활동의 유형별 관리체계 구체화 및 제재기준 강화, 기관별 대외활동 실태분석 및 분기별 교육·홍보 실시 등 제도개선 완료('20.8.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표준지침」 개정) ○ 연구회 주관 국책연구기관 교육과정 추진 시 대외활동 기준 등 관련 교육 실시 * 신임구성원 기본과정('21.3., 11.), 신임기관장 리더십 과정('21.2., 5., 9., 12.), 감사역량 강화과정('21.6., 10.) 등 ○ 연구기관 감사 및 감사부서장 대상 교육·홍보 등 감사 역량 강화 실시 * (감사협의회 '21.12, 감사부서장협의회 '22.3. 6.) ○ '21년 운영실태점검(8.~10.)을 통한 및 대외활동 점검 및 결과 정리('21.10.~'22.2) 《향후추진계획》 ○ 연구회 주관 국책연구기관 교육과정 추진 시 대외활동 기준 등 관련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 '22년 하반기 운영실태 시 대외활동 점검 및 제도개선 유도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2. 연구기관에서 운용 중인 시용제도의 폐지·축소 혹은 고용계약제 폐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기관 시용제도 및 고용계약제 운용 현황 파악 및 기관별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청, 연구회 내부검토 및 기관 권고(안) 마련('22.상반기) 《향후추진계획》 ○ 시용제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용기간·시용평가 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예정('22.하반기)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내 사문화된 “고용계약제” 문구 삭제('22.상반기) 및 고용계약제 폐지 권고 예정('22.하반기)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3. 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매달 연구기관 인력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처우·차별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 중 * 비정규직 처우관련 규정 유무, 차별해소 계획, 임금수준 비교, 불합리한 차별 개노력 및 실적 등에 대해 평가 ○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운영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용토록 관리 중 <table><tr><th>기간</th><th>구분</th></tr><tr><td>2년 이상</td><td>사업인건비 내 무기계약직, 연구직(박사·석사 급) 등</td></tr><tr><td>2년 미만 9개월 이상</td><td>정년 후 재고용 인력, 신규 사업 수행 인력 등</td></tr><tr><td>9개월 미만</td><td>데이터 입력 등 연구과정상 단기·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등</td></tr></table> 《향후추진계획》 ○ 연구기관 내 비정규직 규모 및 처우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기간	구분	2년 이상	사업인건비 내 무기계약직, 연구직(박사·석사 급) 등	2년 미만 9개월 이상	정년 후 재고용 인력, 신규 사업 수행 인력 등	9개월 미만	데이터 입력 등 연구과정상 단기·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등
기간	구분									
2년 이상	사업인건비 내 무기계약직, 연구직(박사·석사 급) 등									
2년 미만 9개월 이상	정년 후 재고용 인력, 신규 사업 수행 인력 등									
9개월 미만	데이터 입력 등 연구과정상 단기·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등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4. 국제 신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산업· 통상·외교·안보정책 등)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해 구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조직 운영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지원 기능 강화 추진 ○ 글로벌 불안정성과 양극화 대비 및 新통상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신통상전략팀」 신설하여 통섭적·선제적 연구 추진중 ○ 경제안보 전략 연구 강화 - 최근 대외경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인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핵심 국정과제 “능동적 경제안보 추진과 공급망 강화”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경제안보전략실」 신설 - 대외경제전문가풀 경제안보연구회 발족 및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를 출범하여 경제안보 이슈를 선제적 으로 점검하고 경제안보 관련 담론 주도 《향후추진계획》 ○ 인도 「델리사무소」 신설 - KIEP 델리사무소 운영 사업을 통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신질서 재편에 대응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5.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대응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미중경쟁시대 전략적 대응을 위한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관련 연구 강화 - <경제안보TF>를 「경제안보전략실」 산하 <경제안보팀>으로 확대·재편하여 조직화하고, <미중 통상관계 TF>와 병행 운영하여 대응 ○ 중점 추진 중인 5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미·중 경쟁시대 전략적 대응 강화”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책 대응 강화 위한 연구 추진 * '22년 5대 정책분야 ① 미·중 경쟁시대, 전략적 대응 강화 ② 신통상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③ 탄소중립 추진 지원 ④ 글로벌 불안정성과 양극화 대비 ⑤ 신흥지역 협력 다변화와 상생형 국제 개발협력 확대 《향후추진계획》 ○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시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관련 연구 기획 및 반영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핵심 정책을 분석하는 과제* 기획 * (과제(안))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 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산업연구원	36. 방위산업센터장의 KAI 자문계약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겸직 및 대외활동의 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외부공문 접수시스템 개선 ※감사 지적에 따른 산업研 후속조치 - 대상자(방위산업연구센터장) 징계 처분('20.12.) - 대외활동 신청·승인절차 개선 추진 및 대외활동·대가신고 점검 시행 《향후추진계획》 ○ 대외활동 관리체계 강화 지속 ○ 외부공문 접수시스템 개선 ○ 이해충돌 방지 점검체계 운영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개발 연구원	37.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다 정교한 정책조합 제언으로 국책연구기관 역할 제고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예상 밖의 빠른 경기회복이 시현됨에 따라 완화적 정책기조의 일부를 점진적 으로 정상화하는 정책조합에 대한 연구를 발표('21.11.) - 이러한 정책조합 분석을 '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현안 분석 결과도 발표 《향후추진계획》 ○ 향후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보다 조화롭고 정치한 정책조합을 제언함으로써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 경주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개발 연구원	38. 재정확대와 긴축재정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이 오해 없이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정·금융 정책조합에 대한 보다 강건한 분석 및 홍보 강화 - '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 관련 내용 수록 및 기자브리핑을 통한 홍보('21.11.) 《향후추진계획》 ○ 향후 재정·금융 정책조합에 대한 보다 강건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정부 정책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개발 연구원	39. 공공의료기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개정 연구」,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연구」 《향후추진계획》 ○ 지방의료원 사업제도 개선 기 완료('21.11) - 편익 항목 추가 및 정책성 분석 보완 등 ○ 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교육 개발원	40.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정감사 이후 교원평가제도 현황·쟁점자료 제출* 및 후속 조치 논의('21.11., 박용진의원실) - '22년 출연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현황) 도입 배경 및 목적, 평가의 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 (쟁점) ①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간 신뢰 문제, ②학부모 대상 교육 활동 관련 정보·참여 기회 제공 충분성 문제, ③평가 결과를 활용한 효과적 전문성 개발 문제 《향후추진계획》 ○ 22년 수시연구과제 추진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평생학습자로서의 교사」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수행 예정 * 교원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하되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연구진 확정 예정 (~'22. 2Q)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교육 개발원	41. 구 청사 매각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처리결과》 ○ 서초구 입장,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답변 및 서울부시장 면담결과 서울시 정책적 사업(지원금)으로 SH의 당초 사업계획(노인복지 주택 및 행복주택)은 진행하기 어렵기에, 양해각서(MOU) 해지 - 서초구 요구사항은 인허가(급격한 종 상향) 및 사업성 등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SH 입장 * 차입금 이자, 재산세 및 관리비용 등 연 2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기관 경영에 어려움 발생 《향후추진계획》 ○ 감정평가 및 매각 입찰공고 실시 - 서울시·SH 등에서 입장변화 및 별도 진행사항이 없어, MOU 해지 - 감정평가 완료(22.06.17.) - 캠프 온비드시스템 통해 매각 입찰공고 실시(6월말 예정)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42.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긴급 현안 (단계적 일상회복 등)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 전략, 정책 대안 등 연구기획 - 코로나19 관련 현안 대응 및 회복 전략 등 정책 연구 9건 (자체 6건, 수탁 3건*) 기획 및 수행(2021.10월 이후 기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중심의 「포용적 회복 연구단」 운영 및 협동연구(No.1) 기획 포함					
		No.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예산 (천원)
		1	수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조성은	21.10.14~22.06.30	400,000
		2	기본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김현경	22.01.01~22.12.31	35,000
		3	기본	포스트 코로나시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지역주도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황주희	22.01.01~22.10.31	81,000
		4	기본	사회재난 영향평가 : 코로나19가 유럽과 한국의 고령층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최혜진	22.01.01~22.10.31	35,000
		5	일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신윤정	22.01.01~22.12.31	40,000
		6	일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이태진	22.01.01~22.12.31	178,063
		7	연개금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추이와 변동	정홍원	22.05.01~23.02.28	27,000
		8	수탁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발생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 연구	김기태	22.05.12~22.10.31	48,000
		9	수탁 (보건복지부)	코로나 전후 소득분배 진단과 정책대응 연구	김태완	22.05.16~22.11.30	30,000

		《향후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 전환에 대응하는 현안 대응 연구수행 및 수시 연구과제 발굴 - 방역·민생 공존 현황 진단 및 단기·중장기적 통합적 대안 모색 - 일상회복 전환 등 환경변화 포괄 예정
--	--	---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육아정책 연구소	43. 전 기관장 비위행위 수습 마무리 진행 및 공익신고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민사소송 패소 확정('21.2.)에 따라 동일 사례 재발 방지 자체개선계획(안) 이사회('21.11.) 보고 후 판결금 지급 완료 ○ 신임 기관장 취임 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또한 언론인터뷰에서 신임기관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공익신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인권감수성 제고 교육, 갑질예방 교육 등 《향후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공익신고자*가 기관 업무 복귀 시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관 차원에서 노력 * 현재 질병 휴직 중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44. 연구기관 행사 개최 시 정치 편향적 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양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관 행사 개최시 편향적 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 유지 《향후추진계획》 ○ 연구기관 행사 개최 시 기획 단계부터 발표자·토론자의 정치적 성향을 검토하여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노력 이행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45. 보훈섬김이 등 가사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로 정책연구 제안서 제출('22.2.)하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제 수행 중 - 과제명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등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2.3.21.~8.17. 《향후추진계획》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섬김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시 적극협력 예정